

李 ‘K-방산’, 김경수 ‘제조업 위기’, 김동연 ‘내수침체’ 집중

민생 살피는 민주당 경선후보

李,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방산산업 위상·선택적 모병제 언급

김경수, 스웨덴 말뫼시 시장 만나
韓 제조업 위기 탈출 해법 논의
김동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K-방산’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등 충청 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시 유성구 소재 ADD에서 임직원 40여 명과 만나 방산 산업의 달라진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국방 산업 발전에 대한 ADD의 기여를 높게 평가했다.

이 후보는 “한국은 국방비를 대규모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투자해야겠지만, 여력을 경제력 향상에 쓰면 어떨까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한다”며 “(정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년 중 일부)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이들이 전문 무기 장비 체계를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사람으로 특화하면 훌륭한 직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ADD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청년들이 과거처럼 단순 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히고, 전역 이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해주는



김경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스웨덴 말뫼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K-방산 정책 발표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 ▲방산 수출 기업의 R&D (연구개발) 세액 감면 ▲방산 스타트업을 육성 및 방산 병역특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함께 발표한 충청 지역 공약 발표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4·19학생혁명기념탑에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시 시장을 만나 탄소 중립(넷제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스웨덴 말뫼시는 조선 산업이 발달했었지만, 신흥국의 조선 산업이 부상하

면서 쇠락을 겪었고 이후 교육·연구 혁신과 유럽연합(EU)의 지원 아래 문화 도시로 탈바꿈했다. 김 후보 측은 한국의 말뫼시의 지혜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 탈출의 해법을 얻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

김경수 후보는 “말뫼시가 제조업에서 지식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며, 이는 비단 환경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충북 일정을 소화하며 내수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충북 서원구 소재 한 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국민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저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계층에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어려운 계층이 소비를 함으로써 소비가 진작되고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월권’에 제동 걸린 한덕수, 차출론에도 타격

한재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임명절차 중단
‘韓 출마’ 부정적 의견도 과반 넘어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현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견으로 인용되면서 현재 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됐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조성하고 있는 ‘한덕수 차출론’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선 차출론에 대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당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 차출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차출론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고 난 뒤,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오랜 공직 생활을 한 만큼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행정부 발 관세 정책 위기를 타개할 경제 관료로도 평가 받고 있다. 21대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한 권한대행과의 최종 단일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덕수 차출론’자들의 주장이다.

‘한덕수 차출론자’였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캠프에 전격 합류해 김문수 후보를 최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후보로 만들고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 협상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던 행위는 ‘한덕수 대망론’이 일고 있는 분위기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찬물을 끼얹었다. 한 권한대행 측이 현재에 두 후보자의 지명 행위는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고 각하 처분을 요구해 “말장난 하나”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명 행위가 아닌 발표였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 자체가 없어서 각하 처분해야 한다는 것.

이는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한 것도 부정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한도 없이 현재 재판관을 지명하고, 스스로도 구렸는지

지명은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현재의 결정으로 망신살이 뻗었다”며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이다. 창피하지도 않나.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행으로서 대선관리와 관세협상 예비협의를 전담할 거면 당장 불출마선언을 하고,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관세협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국익과 국민을 노획의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는 조사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6%,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출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5%로 바람직하지 않다(38%)는 의견보다 높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3.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1차 경선토론회 대진표 완성

A조,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B조,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국민의힘이 17일 8명의 21대 대선 경선후보들을 한 자리에 모아 미디어 데이를 열고 1차 경선 토론회 대진표를 완성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

어 데이’를 개최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토론회 대진표는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후보가 A조로 청년미래를 주제로 19일에 토론했다.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는 B조로 사회통합을 주제로 20일에 토론했다.

각 주자들은 1분 출마의 변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는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정년 유연화·계속 고용제” vs “단계적 조정”

(국민의힘)

(민주당)

≫ 1면 ‘정년연장·직무성과급제…’서 계속

◆ 국민의힘 “정년 유연화·계속 고용제 도입”

국민의힘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중장년층의 경륜이 사회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정년 유연화를 실시하고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흔히 통용되는 ‘정년 연장’보다 ‘정년 유연화’에 방점을 찍으며,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대 간 일자리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직무성과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민주당 “연내 정년연장 입법”

민주당도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 연장에 소득공백기를 매우고 다수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는 노사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는 9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공동 발표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중장년층의 임금을 낮출 수 있어 노동조합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